

13개 공공기관 업무 개시...지역경제·문화·농업 도약 준비

'격랑 2014' 이슈 진단

③ 빛가람 혁신도시 시대 개막

호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축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올해 공공기관 이전을 사실상 마쳤다. 16개 이전 대상기관 가운데 국내 최대 공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업무를 개시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이들 기관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높다.

이들 기관들이 지역 에너지, 농업, 문화, 정보통신 등과 결합하면서 지역 기술력과 콘텐츠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뒤져진 산업경제를 도약시켜 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면서 유출을 막고,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이주를 통해 인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공공기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을 분야별로는 살펴보면 한국전력, 한전 KDN, 한전 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이 4곳,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년 6월 이전 예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2015년 12월 이전 예정) 등 농생명 관련이 5곳이다. 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

한전 에너지밸리 추진 등 각 기관 지역 연계사업 활발

협업체제도 속속 이전...나주 인구 10만명 회복 눈앞

인터넷진흥원(2015년 12월 이전 예정),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정보통신 관련 4곳,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문화예술 관련 3곳이 나주에 정착했거나 조만간 이전하게 된다.

이들 중 한국전력이 가장 발빠르게 지역은 물론 다른 기업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전은 광주·전남권을 전력산업 특화 창조경제 혁신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빛가람 에너지밸리(Energy Valley)'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KPS·한전KDN 등과 함께 지역 산업,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에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ESS,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등에 집중해 미래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사업에는 국내 정보통신 대기업인 KT까지 참여하기로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내에서 전국 최초로 전혀 거론된 바 없는 새로운 사업과 계획을 시도하거나 발표하면서 광주·전남이 '창조의 장'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수조원에 이르는 이전 공

공기관의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경쟁, 공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지역 인재들의 도전 등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도시가 자리한 나주는 2015년 인구 10만명 회복을 꿈꾸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이전기관, 이주 직원 및 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민이다. 공동주택 분양이 늦어지면서 이달 초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136세대 331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다운 편의시설을 바라는 이전기관 등의 수요와 바람을 제때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통 불편과 함께 의료 및 교육시설 미흡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관 직원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도 서둘러 갖춰가는 추가 노력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 분양과 관련 투기 세력을 배격하고 적합한 기업들을 유치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관련 산업의 진흥으로 이끌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난 14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끝으로 올해 이전대상 공공기관 16곳 가운데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전력을 포함해 13곳이 이전을 마쳤다. 지역민은 광주·전남 미래의 핵심축이 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관련 산업의 진흥, 인재 채용, 지역 발전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버스업체 불투명 경영에도 혈세는 꼬박꼬박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를 심하게 질타했다.

윤 시장은 "취임 직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도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임금 결정은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등을 연구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시장의 발언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임금착복 의혹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도 올해 지급된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278억23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재정지원금은 업체들이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체 서류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분권교부세를 건네주면, 이에 맞춰 나머지 절반에 대해 시외버스는 전남도가, 시내·농어촌버스는 22개 시·군이 부담하

는 절차만 거쳤다. 정산과정이 있지만 재무제표의 수치만으로는, 재정지원금이 전체 업체 수익지출에 어떻게 반영되고 집행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광주시 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해야=광주시는 지난 2007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7년동안 시내버스 회사에 2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했지만, 준공영제 시행 목표인 대시민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은 다반사고, 시청 홈페이지에는 버스 운전원의 불친절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상황부터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광주 시내버스 사고는 537건으로 786명이 다치고 사망자도 8명에 이른다. 이들에 한번 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선이나 버스 확충 등도 제대로 안돼 수완, 첨단 등 신도심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실제 버스노선 신설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4월 이후 3년만인 올 2월 상무 22번 1개 노선을 신설하는 데 그쳤으며, 버스 증차도 2011년 948대에서 968대로 20대만 늘렸을 뿐이다.

최근에는 광주지역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정비비용을 아꼈다며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버스 안전장치를 제거해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반면 시내버스 업체 대표이사들의 연봉은 매년 꼬박꼬박 올라 지난 2012년 5975만원이던 평균 연봉이 지난해에는 6512만원으로 537만원이나 올랐다. 적자 운영이라며 시민 혈세를 받아 업체 대표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꼴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감시는 사실상 방치 수준이다.

시는 매년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 지원액을 회계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류만 들춰보는 수준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전남 시외버스 6개 업체, 시내·농어촌버스 48개 업체=전남도가 지난 2001년

부터 지난해까지 버스업체에게 지급된 예산은 무려 2041억원(국비 1022억원 도비 347억원 시·군비 673억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유류사용량(45%), 차량등록대수(40%), 벽지노선거리(12%), 저상버스 운영(3%) 등의 배분기준을 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남에는 금호고속(차량 평균등록대수 435대), 광신고속(65대), 동방고속(29대), 광주고속(35대), 동광고속(23대), 오동운수(1대) 등 6개 업체가 매달 평균 588대의 등록된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22개 시·군에서는 여수 7개(183대), 순천 3개(168대) 등 모두 48개 업체가 1221대의 등록된 시내·농어촌버스를 운행중이다.

버스업체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업체는 단연 금호고속이다. 차량대수와 운행노선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금호고속이 올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73.8%에 해당하는 68억82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광신고속(11억원), 동방고속(4억4600만원), 광주고속(5억5600만원), 동

광고속(3억2100만원), 오동운수(1400만원) 등 5개 업체에게 24억3700만원이 배정됐다.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금호고속과 광신고속에 투입된 분권교부세와 도비는 모두 242억8300만원과 39억600만원에 달했다.

시내·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금도 매년 증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011년부터 4년간 22개 시·군이 부담한 재정지원금은 322억6800만원에 달하며, 여수시가 50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목포시(42억3400만원), 순천시(41억3200만원), 나주시(31억6400만원), 화순군(16억18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도, "재정지원 필요, 근거는 명확히"=전남도는 버스업체 경영수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지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유류가격,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정차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지원금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지원기준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민간기업인 버스업체를 상대로 차량운행정보 및 수입·지출 등 경영수치의 자료를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넘겨받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이 전자방식으로 업체가 입력하도록 돼 있어 이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외부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경남 등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도민들을 위해 버스업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버스업체는 물론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최적의 방안을 찾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2000억원 이상씩 지원...재정감시는 방치

인건비 황령·부품값 빼돌리기 잇단 사고...검증시스템 시급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움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